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자치 5기가 한 달이 흐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틀을 갖추느라 부산하다.

광주시 남구를 비롯한 광주·전남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출발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기획과 집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데다 도시 행정의 특성상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들어보고,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강 시장의 이갈

은 독재에 “민원현장에 시찰이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광주시 행정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또 강 시장은 상무소각장 임기 내 이전,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 굵직한 현

민선 5기, 마라톤을 생각하라

안에 대해 망설임 없이 대안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신도시 유흥가 음란전단 근절, 주장차 질서 바로잡기 등도 추진해 나름의 개가를 올리고 있다.

광주시 각 자치구와 전남도, 일선 시·군도 민선 5기 출발은 합시다. 전남도는 당장 10월 개최되는 '제1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전력하고 있다. 서남해안관광재단도 조성사업(J프로젝트)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쟁력 높이기에도 도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민선 5기는 스타트와 동

시에 시의회와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다. 취임 초반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강 시장이 '속전속결' 식으로 시정을 꾸러가려하자 시의회가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0일 제190회 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은대식' 시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윤 의장은 "상무소각장 이전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 굵직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돼 아쉽다"고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했

다. 이에 광주시청 간부들이 반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다시 반박성명을 채택하면서 일이 꼬였다.

이같은 기류 속에 4일 강은대 시장과 윤봉근 의장이 만나 의장 폐회사 발언에 따른 시청 고위간부 반발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일에 속도를 내려는 광주시의 '의욕'과 시의회 의 당당한 '견제'의무가 충돌해 빚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건

강한 징조로 보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명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는 점이다.

완주 위해선 속도조절 중요

민선 5기 한달을 지켜보며 언뜻 마라톤이 떠오른다. 전문가들은 마라톤 주자의 능력을 불문하고 "완주를 위해서 오버페이스는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라면 우승이나 좋은 기록을 바라며 출발부터 속도를 내고 싶겠지만, 신체리듬이나 코스 상태를 살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달렸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치기 쉽다.

전문가들은 전체 페이스를 연승보다 훨씬 여유있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지는 만큼 완주하려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년 임기 가운데 한 달 지난 민선자치 5기는 마라톤 풀코스 42.195km에 비유하자면 48분의 1인 880m밖에 달리지 않은 셈이다.

'민선5기 마라톤'에서 완주하려면, 아니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달려야 할지 다시 출발선에 선 심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지방선거 비용 보전 정부가 맡는 게 순리다

광주·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 비용 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재정난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5억~20억 원에 가까운 지방선거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현안사업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의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및 각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32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되고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만 35%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 탓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광주·전남 지자체로서는 빚을 내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광주시의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40%의 수준이고, 전남지역 군 단위는 9~15%에 불과하다. 광주 동구와 남구, 곡성·구례·고흥 등 14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약화된 것은 역대 정부의 '호남 소외정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지방 '출대정책'이 맞물린 데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운용이 한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선거 보전 비용마저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지방선거 보전 비용은 대선과 총선처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 재정이 건실해야 정부도 지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 '교육장 공모제' 제대로 되겠다

장만제 전남도교육감이 지역교육 개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가 공정성 논란으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투명·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모제는 안 하지만 못하다는 점에서 전남도교육청의 교육장 공모제는 철저히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목포시교육장 공모에 나서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상호토론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목포지역과 도교육청 안팎에서 이미 심사 하루 전인 1일 오전부터 일부 심사위원 이름이 오르내려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선정의 편향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1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교조, 지역 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성향 단체 인사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 전에 장 교육감의 도민추천위원회 위원과 교육장 응모자 추천인까지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

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장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일 뿐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장 공모제 실시는 '교육 마피아'도 불릴 정도로 학연, 지연 등 복마전처럼 얽힌 교육계 인사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제 확대가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는커녕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장 공모제가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사전 유출' '편 가르기' 등 정치권의 후진성을 그대로 답습해선 공모제는 오히려 교육계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에도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해 공모제가 명실상부한 지역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재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국내 거시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올해 1분기 수치가 8.1%를 기록해 분기기준으로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최고인 5조원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대기업의 영업실적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23개월만에 처음으로

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최근 출시되었다. '햇살론'은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서민가계의 이자부담 완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서민금융회사가 재원을 출연해 시행하는 보증부대출상품으로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보증서발급을 하고 대출은 서민금융회사를 통하여 이루어

'햇살론' 서민금융의 든든한 동반자

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지표의 회복과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중산층의 비중이 96년 68.5%에서 2009년 56.7%로 줄어들었고, 지난 1분기말 자영업자의 수는 2008년 2분기말보다 55만명이 줄어든 551만 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금융권이 융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금융 및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에 고금리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정책으로 '서민

어지는 금융상품이다. 대출대상자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일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신용등급과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사업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은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로 대출금리는 현재 상호금융(농·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회사는 10.6%, 저축은행은 13.1%로 이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취급금융기관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전장치 없이 애완견 승용차 동승 사고 위험

며칠 전 광주도심에서 운전 도중 승용차 1대가 인도로 달려드는 일을 목격했다. 다행히 급정거를 해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불감증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보니 애완견 한 마리가 그 여성운전자의 차 밖으로 뛰어나간 게 보였다.

아마도 여성운전자가 애완견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 애완견이 조수석 차창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애완견을 잡으려다 핸들을 놓친 것 같았다.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한낮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애완견을 안고 운전 하거나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이해 애견사랑이 정도를 지나쳐 교통사고까지 우려가 된다는 것이 문제다. 운전자가 진정으로 개를 사랑한다면 차량 뒷좌석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애완견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이동용 가방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애완견의 돌발적인 행위로 운전자의 시야에 혼란을 주어서 사고가 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차량 운전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개를 사랑하는 만큼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로 안전장치를 이용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망한다 하겠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운정동

은편칼럼

서미정



불붙던위와 장마가 한창인 요즘, 60평정도 되는 필자가 운영하는 주간보호 시설은 사람들로 평강히 북적이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7월에는 학교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시설로 밀려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일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15개소(300여명)의 시설마다 현재 정원(평균 15명)의 2~3배가 넘는

학령기 이후의 이들은 오갈 데가 없다. 특히 일부만 지역사회활동시설(2009년 말 현재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생활시설 등의 이용이나 취업이 필요한 광주시 거주 18세 이상 지적장애인(광주시 통계)은 3090명. 이중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1065명(29%)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무료한 생활을 혼자서 또는 가족의 보호하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배회하다

지적·자폐성장애인 위한 안전망 확충해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가족의 맞벌이 또는 기타의 가정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및 20살이 넘는 성인인 퇴직자도 할 일없이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일상에서 늘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은 매우 심하다.

이런 가족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되고 바로 이런 현실에 사회복지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생활시설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활동시설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급함을 넘어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길 수 있도록 시급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사자의 채용개선과 피부부노를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뤄지길 이번 민선 5기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표명한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회 회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에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featuring a 'No Equal' (無等鼓) theme. It includes a cartoon of a bird and text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quality and diversity.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are provided.